

광주 NGO, 어등산 개발 공익감사 청구

광주시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 감사를 청구해 감사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광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하 광주경제정의실천)에 따르면 광주경제정의실천은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어등산관광단지 공유재산 미편입과 60억원대 국방부 땅 매입 부지 제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투자유치 보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어등산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주)등산리조트가 대상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함에도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경관녹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광주경제정의실천은 판단했다.

특히 2012년 9월 원고 어등산리조트와 피고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의 1차 법원 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어야 함에도 시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 등도 법률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 김동현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를 풀고 52%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성이 강한 관광단지를 추진했음에도, 공익성 없는 대형 소규모들이 들어서는 게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제때 정산 처리되지 않고 전년도 사업이 채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집행기관인 광주시의 지도·감독·조사·명령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다.

민간위탁도 수탁기관 선정문제와 독점위탁의 관행적 장기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여전하고 이 과정에서 매년 한 차례씩 실시토록 돼 있는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시 간부공무원의 산하기관 여직원 해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해의 출장 경비 유용 등 부적절한 집대 관행 등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의혹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광주시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2015년 4039억원, 지난해 4903억원에 이르고, 법정사무

국방부 소유부지 60억 제외 공유재산 미편입 지방보조금·민간위탁 지도·감독 도마 위 경질련 “투자촉진·유치 보조금도 의문점”

경비와 국제행사, 전국단위 행사 등을 제외한 총한도액은 2015년 523억원, 지난해 553억원에 달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4년 182건에 2866억원(시비 913억원), 2015년 217건에 3078억원(1059억원), 지난해 226건에 3250억원(1157억원)으로 매년 사업수와 예산액이 늘고 있다.

투자 관련 보조금도 지방투자촉진 8개소 90억원, 투자유치 11개소 26억5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일부는 폐업 처리됐고 일부는 보조금 지급

액과 회계감사보고서상 보증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시 투자유치과 기타 수입(투자금 회수)이 16억원에 이르는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청구서가 이제 막 접수된 상태라 청구인 측 주장과 근거자료를 살펴본 후 감사에 착수할 지, 감사 대상이 아닌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폭염 속 오락가락하는 빗 줄기 폭염 속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린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찬성vs반대’ 광주 어등산 개발 놓고 주민·중소상인 갈등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개발지역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소상인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제별 입점지 지 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제별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어등산 특혜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유통제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등산리조트의 팔포장 개발 먹튀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어등산 개발사업이 또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유통제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등산리조트의 팔포장 개발 먹튀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어등산 개발사업이 또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앞서 광주 광산구 운수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어등산관광단지 피해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등산 테마파크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12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며 황폐해진 개발부지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부동산 가격

이 하락,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시는 주민 피해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조속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아직까지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 이상 시정에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6월에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시민단체 기자회견 장소를 찾아 격렬하게 항의했으며 이 때문에 입점지지 대책위의 일정이 10여분 지연되기도 했다.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지만 몸싸움은 없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뒤 각각 정정서와 의견서를 운영진 시장에게 전달했다.

입행택 기자

이웃집 금품 훔치려 한 40대, 집주인에 덜미

이웃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이 집주인에게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아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체포(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임모(38)씨의 2층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체씨는 임씨가 외출한 틈을 노려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씨는 주택 작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던 중 귀가하던 부인에게 발각돼 화장실로 숨은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임씨에게 붙잡혔다.

임씨는 경찰에 신고해 체씨를 인계했다.

붙잡힐 당시 체씨는 자포자기 한 상태로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술마시며 다투다 지인 살해한 50대 검거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서로의 외모에 대한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A(50)씨를 살해한 혐의로 B(5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모에 대해 비하성 발언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 이유를 흥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객 몰래 휴대전화 이중개통 대리점장 붙잡혀

고객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이중개통하고 일명 ‘폰깎업자’에게 팔아 넘긴 휴대폰 대리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리점장 A씨(29)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 휴대폰 유통업자 B씨(35)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리점 대표 C씨(25)를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13명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13개의 휴대폰을 이중개통하고 이를 B씨에게 넘겨 약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개통된 휴대폰들 1대당 60만~90만원에 판매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고객에게 가입즉시 돌려줘야 할 신규가입신청서 525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대리점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촬영해 공유하고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취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과정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차선변경 차량만 ‘왕’ 보험금 타낸 사기단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방모(2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씨 등은 지난해 5월17일부터 10월13일까지 경기 화성·수원 일대 원형교차로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경기 화성시 인근 페스트푸드점에 모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만한 장소를 사전에 모색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면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재촉했다.

이들은 진로변경 사고가 경찰서에 접수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받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